"부장검사 외 현직검사도 그랜저 받았다"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서 의혹 제기
"물가 불안 해소 금리 인상해야" 한목소리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장검사 뿐만 아니라 후배 현직 검사도 사건청탁을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S건설 김모 대표가 사건수사를 청탁하며 부장검사 정모씨와 함께 후배인 도모 검사에게도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S건설 직원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의 그랜저 수수 의혹을 확인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가 그랜저 받았다는 것은 수사팀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농식품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11월 발간할 예정인 한식 관련 서적이 1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이날 "한식재단 명예회장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문요리사도 아닌데 개인의 이름을 넣어 요리책을 만들면 관심은 한식이 아닌 저자에게 쏠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KBS 이사회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의 인상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KBS 이사회에서 결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가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KBS의 강도높은 자구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KBS가 자구노력 없이 수신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반대했으며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강행처리되면 방통위, 국회에서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정부 측이 전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기재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 저금리 정책이 물가불안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야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현재 금리는 금융위기가 다시 오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조속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두 발언하는 손대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 인물

성범죄자 '전자발찌' 추적기 지하철역 설치 이끌어

법사위 이정현 의원

전남 출신의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성실함을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꼼꼼하게 검찰, 법원,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들의 맹점을 꼬집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심에서의 실형 선고율(48.7%)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 판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에 성범죄 전력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아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 법무부로부터 전국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중계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율(4%)이 경찰(1.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검사의 과오나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전체 무죄 선고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의 송곳 질의는 청와대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 97년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 근무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편법을 통해 지금까지 33명의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 가운데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보다 치밀한 감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도 이 의원의 칼날 질의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5년간 헌법소원 심판사건 평균 각하율이 62%에 달한다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헌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 검찰,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일수록 국민과 소통하며 서민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남 출신 국회의원은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한, 자극적 용어 동원 '孫 때리기'

지지율 상승에 견제

한나라당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태정치', '억지 정치공세'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 손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손 대표가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한 사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안엔 손 대표가 최근 배춧값 파동 등을 고리로 여권을 집중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안상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위장된 대운하라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구태정치 모습이어서 실망스럽다"면서 "더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것이란 억지 정치공세는 포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과거 14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손 대표가 한나라당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 다소 강경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사안을 왜곡하는 발언은 중단해달라. 여야가 싸우지 않는 정치가 되도록 제 1야당의 지도자는 자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주 조계사 방문에 이어 이날엔 개신교를 비롯, 천주교, 원불교 등 각 교계 지도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주말인 16~17일에도 광주 서구청장 재보선 지원유세, 경기 남양주 4대강 현장 방문, 청년 실업문제를 다룬 영화 '방가방가' 관람 등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작년 실직 세대 보험료 21% 올라

지난해 가장의 실직·퇴직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뀐 세대들은 이로 인해 보험료가 평균 21%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8일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 등의 이유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가입 조건이 바뀐 세대는 모두 129만3000 세대였다.

또 이들은 직장 가입자일 때는 월평균 4만5013원을 건보료를 납부했지만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에는 이전보다 21% 정도 오른 5만4464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바뀐 130만4000세대는 가입자격이 바뀌면서 매월 평균 5만8147원 내던 보험료가 3만9046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 재산가 1082명 건보료 축소 납부

재산과 소득이 수억원대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다니지도 않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속이고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하다가 발각된 사례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082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9일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위장취업을 통해 총 594명이 건보료를 축소 납부했다. 이들 지역가입자는 총 2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위장취업을 통해 3억60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488명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당초 17억원보다 훨씬 적은 2억9000만원만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46%인 494명, 경기에 30%인 326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주에도 13명, 전남에는 10명이 위장 취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독도 유사시 해군 함정 日보다 1시간 도착 늦어

독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해군함정이 동해안 해군기지에서 독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일본보다 1시간 이상 늦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평택 2함대의 독도함에서 진행된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라며 "이에 비해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MB "농수산물 불공정 유통구조 개선"

이명박 대통령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직접 챙기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방송된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일부 중간 상인의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산지 농민은 고생해서 싼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사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이 비싼 데 대해 이례적으로 중간 상인의 독과점이라는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까지 직접 지목함에 따라 강도 높은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배추 등 농수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데는 폭리를 챙기기 위한 중간 유통 상인의 불공정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2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직거래 확대 등의 수급안정 비상대책 수립 일정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

中 시진핑 국가부주석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중국의 연례 최대정치행사의 하나인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 나흘째인 18일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베이징(北京) 징시호텔(京西賓館)에서 열린 5중전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시 국가부주석이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르면서 일단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후계로서 최고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연합뉴스